

# 특집

## 남북한 정보기술(IT) 산업의 협력 방안

북한의 정보기술 산업 현황과 남북 협력 과제 • 이태섭

중국의 실리콘 밸리: 中關村 • 김화설

북한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성공 요건 • 박정동

# 북한의 정보기술 산업 현황과 남북 협력 과제

이태섭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의 통신 현대화 사업

**지**난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은 제4항에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재확인하고 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이와 같은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화의 균형적 발전이다. 북한을 배제한 남한만의 정보화는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21세기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정보화는 남북이 함께 하는 정보화, 민족의 정보화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남북 정보화의 균형적 발전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먼저 북한의 정보화 수준부터 살펴보자.

현재 북한의 정보화 수준은 남한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북한의 정보통신 인프라 수준은 남한의 70년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세계통신보고서'에 의하면 1997년 기준으로 북한의 통신 회선은 약 120만 회선이며 전화보급률은 인구 100명당 5 회선 수준이다. 북한의 전화 통신망은 군사용과 공공 행정망부터 먼저

구축되어 왔으며, 일반 개인을 위한 통신망은 아직 미약하다. 일반 주민은 대개 공중전화를 이용한다.

공중전화는 평양, 함흥 등 대도시의 주요 지점과, 시·군 지역의 체신소에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1996년 당시 2,720여 대 수준이었다. 통신 시설의 디지털화는 남한이 65.1%인 데 비해 북한은 4.6%밖에 되지 않는다. 통신 시스템의 경우 농어촌에는 수동식 교환기, 주요 도시에는 기계식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평양에는 프랑스 알카텔이 제공한 전자식 교환기 2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시외 전화망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최근 북한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광섬유 케이블을 통한 전국 시외 전화망의 현대화 작업이다.

현재 북한은 낙후된 통신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해 전화의 자동화·디지털화·전자계산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평양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간의 통신 선로를 광섬유 케이블로 교체하였다. 북한의 광케이블 공사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협력 아래 평양시와 지방 도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평양-

함흥, 평양-신의주, 신의주-평안북도 내 16 개 시·군에 광섬유 케이블화 공사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평양과 주요 도시간에 설치된 광케이블의 총연장은 1,400 km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직까지 북한의 장거리 통신 회선은 대부분 동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북한은 1997년 말까지 평양과 70여 개 시·군간의 교환기를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외 지역과 평양간의 스위치는 아직도 수동식 교환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 북한의 컴퓨터망 체계

북한의 통신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성형 구조, 즉 지방과 지방을 직접 연결하기 보다 평양에 모여 분산되는 중앙 집중적 구조를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앙을 매개로 한 도와 도 사이의 연결, 도를 매개로 한 시·군과 시·군의 연결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북한의 공공 행정 구조와 관련이 있다. 북한의 행정 경제 관리 체계는 중앙 집권적인 부문별 관리 체계(내각-성-관리국-기업소로 이어지는 생산적 표식)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화의 균형적 발전이다. 북한을 배제한 남한만의 정보화는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의 통신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성형 구조, 즉 지방과 지방을 직접 연결하기 보다 평양에 모여 분산되는 중앙 집중적 구조를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를 기축으로 하여 여기에 지역별 관리 체계(중앙-도-시·군으로 이어지는 지역적 표식)를 결합시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광섬유 케이블화 공사와 컴퓨터망 구축 역시 이와 같은 구조로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 행정 경제 관리 체계의 자동화·디지털화·컴퓨터화였다.

즉 광섬유 케이블화 공사를 통해 전화 통신망이 정비됨에 따라 컴퓨터망도 정비되었는데, 그것은 부문별 컴퓨터망 체계와 지역별 컴퓨터망 체계를 기축으로 하여 구축되었으며, 여기에 개별적 컴퓨터들이나 각 기관, 단위의 컴퓨터망들이 서로 연결되어 전국적인 통합정보처리체계로 발전·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 황해남도 해주시에 컴퓨터센터가 설립되었는데, 이 센터는 황해도의 정치·경제·문화·과학 기술 발전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보관·보급하는 종합적인 기지(단지)로서, 도내 시·군의 컴퓨터와 전국의 컴퓨터망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센터는 '섬멸전 방식'에 따라, 산업 지역별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각 도청 소재지별로

하나씩 차례대로 구축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현재 북한에서는 과학 기술 통보 사업의 컴퓨터화가 실현되어 전국적인 정보 검색서비스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북한의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주관하는 컴퓨터망 정보 서비스를 보면, 1,650만 건을 수록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광명'을 통해 과학 기술 자료를 검색해 주며, '혜성'으로 전자우편을 왕래케 하고 파일전송 시스템('자료샘')도 활용 중이다. 데이터 통신 체계의 구축으로서, 이 컴퓨터망에는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인민대학습당, 발명총국, 조선컴퓨터센터, 평양정보센터 등이 연결되어 있다. 예컨대 최근 강원도 원산원동기공장 내에 건립된 전자도서관은 위에서 열거한 모든 과학 연구 기관 및 모든 도서관과 연결되어 있어 이들 기관의 자료들을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들을 인쇄할 수 있다고 한다.

### 북한의 국제 통신망과 인터넷

평양에서부터 국제 자동 전화(IDD)는 세계 170여 개 도시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 통신망은 평양-북경-모스크바를 연결하는 무선망과 신의주-북경, 청진-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유선망이 있다. 서방으로는 평양-싱가포르-홍콩간의 단파 무선과 중국의 북경 지구국을 중계지로 하는 간접 통신망이 있다. 특히 1995년부터 미국의

AT&T가 미국과의 통신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 뉴욕, 로스엔젤레스 등 세 도시에서 평양으로 전화가 가능하다. 남북간에는 연락 업무 및 회담 지원용으로 직통 29 회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제3국을 경유하여 14 회선이 경수로 사업과 금강산 관광 지원용으로 연결되어 있다.

무선통신 시설은 대부분 군부와 사회안전부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공중 업무용 이동 전화와 무선 호출 서비스는 나진·선봉지역에서만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금강산 관광 지대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다. 최근 평양 지역에서도 무선 호출의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정보도 있다. 8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국제위성통신국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와 위성 통신 및 위성 TV 중계도 가능하다. 일본과는 1990년에 '위성 통신 회선 개설 협정'을 체결하여 위성 통신이 가능하며, 국제 전용선을 통해서도 통신이 가능하다.

인터넷의 경우, 북한의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지의 연구 기관과 정보 교환을 위해 북한 내 중요 기관과 연구 기관을 컴퓨터망으로 연결시켜 놓고 있으며, 1999년부터는 무역 정보 등 보다 폭 넓은 정보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국가 식별 도메인 .kp로 개설된 사이트는 아직 없다. 북한에서 인터넷은 당·정·군 등 일부 기관에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

에 있는 유엔기구나 외국 대사관은 국제 전화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자우편을 송수신하고 있다.

북한은 서방의 해킹과 자본주의적 사상 문화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따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인터넷을 허용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내적으로 전국적인 컴퓨터 통신망을 어느 정도 구축해 놓은 상태이며, 인터넷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인터넷을 수용할 수 있으나, 정책적으로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북한은 서방의 해킹과 자본주의적 사상 문화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따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인터넷을 허용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북한은 현재 보안 관련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을 것으로 파악되며, 이 분야의 기술 수준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 낙후된 북한의 하드웨어 산업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북한의 컴퓨터 산업 역시 남한에 비해 기술과 인프라 등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형편이다. 북한의 컴퓨터 생산 능력은 평양컴퓨터조립공장에서 32비트 IBM PC 호환 기종 2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추정된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PC는 대부분 486급 이하이며, 펜티엄급의 PC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한정되어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16메가 초대규모 집적회로(IC)를 개발하였고, 조선과학원 산하의 전자공학연구소에서 IC 시험 공장을 설립하

는 등 일정한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80년대 후반 김책공대 내에 반도체연구소 설립하였으며, 평양집적회로공장, 3대혁명붉은기 집적회로시험공장, 단천영예군인 반도체공장 등을 통해 인쇄회로기판(PCB) 및 기초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해주와 단천에도 반도체 공장이 있다. 북한은 64M D램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기술 수준이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 1998년 8월에 발사된 '광명성 1호'의 경우, 8만 가지 이상의 부품을 자체 조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군사 기술과 관련된 정보통신 하드웨어 부문은 무시할 수는 없을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드웨어 개발과 아울러, 현재 북한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의 하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실제로 북한의 컴퓨터 산업은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매우 낙후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며, 점차 그 개발 분야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북한은 소프트웨어의 산업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소프트웨어 산업은 앞으로 북한의 주요 수출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드웨어 개발과 아울러, 현재 북한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의 하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실제로 북한의 컴퓨터 산업은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매우 낙후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며, 점차 그 개발 분야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 주목받는 북한의 소프트웨어 산업

현재 북한은 김정일 총비서의 과학 중시 사상, 과학 중시 정치에 따라 정보 기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종합대학 안에 컴퓨터대학을 설립하고 평양에 평양컴퓨터기술대학을 설립한 데 이어, 최근 함경남도 함흥에도 함흥컴퓨터기술대학을 신설하였다. 컴퓨터센터의 설립 방식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각 도청 소재지별로 컴퓨터기술대학을 하나씩 차례대로 설립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정보 기술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은 중앙에서 지역으로 내리 구축하는 체계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 각 도는 그 거점으로 위치지어져 있는 듯하다. 과학 기술 발전 전략 역시 기초 과학 기술의 발전(파종형 전략)에서부터 시작하여 응용 과학 기술의 발전(수확형 전략)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1995년 5월, 기초 과학 부문의 과학 기술자를 양성하는 이과대학을 비롯해 주요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평양시 은정구역을 '과학자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또 1998년 김정일 총비서가 컴퓨터 교육

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 이후, 비록 개인용 컴퓨터 보급률은 저조하지만 각급 교육 기관,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컴퓨터 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작년 8월 전국 대학생 컴퓨터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경연(예선)에 각각 2만 명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대회는 각종 프로그램과 하드웨어에 완전히 숙련되지 않고서는 참가하기 힘든 매우 높은 급의 경연이라고 한다. 현재 북한의 고급 IT(정보 기술) 인력은 1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컴퓨터 산업은 하드웨어 부문의 기술과 인프라 부족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부문의 우수한 기술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음성 인식, 문자 인식, 지문 인식 등 각종 인식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으며, 각종 제어 시스템과 자동화 시스템에서도 국제적인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북한은 워드프로세스 등 기본적인 기술은 물론이고 한의학 의료 정보 시스템, 자연어 처리 시스템, 위성 등 우주 항공 분야, 그리고 멀티미디어, 게임,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등의 분야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주요 특징은 인공 지능, 퍼지 이

론, 영상 처리, 문자 인식, 음성 인식, 지문 인식, 기계 번역 등 첨단 정보 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이 많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정보화에 필수적인 정보통신을 포함한 하드웨어 분야의 기술과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남북 정보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의 정보화 수준 차이를 줄이는 것이며, 남북의 정보화 수준을 함께 제고시키는 것이다.

또 군사 기술과 기초 과학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수치 계산, 통계 프로그램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거리 유도 무기의 개발 등 각종 군사 무기의 제어 장치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북한이 직접 개발할 정도이다. 민수용과 달리, 군사용 통신 기술과 통신 장비 산업 역시 북한의 IT 산업 가운데서는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철도, 항공, 기상, 수문, 해상을 포함해 농업, 공업, 무역 등 산업 전 분야와 교육, 의학, 체육, 문화 예술, 출판 보도 등 사회 전분야에 광범하게 도입·적용해 나가고 있다.

### 통신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정보화에 필수적인 정보통신을 포함한 하드웨어 분야의 기술과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남북 정보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의 정보화 수준 차이를 줄이는 것이며, 남북의 정보화 수준을 함께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북한의 낙후된 하드웨어 분야의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며, 남북 IT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물론 정보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IT 관련 인원과 물자뿐만 아니라,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남북 철도망의 연결뿐만 아니라 유무선 통신 회선과 인터넷 등 남북 정보통신망도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 통신은 통상과 통행보다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당분간 남북 통신망은 경수로 사업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 또는 체육 문화 교류 사업과 같이 개별 목적 사업별로 추진될 것이다. 남북 인터넷 연결 사업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남북 인터넷 협력 사업은 아직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남북 정보통신망 연결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 등 남북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북한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 서비스보다 통신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정보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북한의 통신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필요로 한다. 공공성 측면의 사업은 정부의 몫이며, 상업성 측면의 사업은 기업의 몫이 될 것이다. 정부가 사업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것은 북한의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다. 전화 교환기 교체와 광섬유 케이블화 공사 등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호환성 확보 등 남북 정보통신 인프라의 통합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전화 교환기 교체 사업에 대한 지원은 시급하다. 시장 선점이 중요한 통신 사업에 있어, 북한의 통신망이 외국 자본에 의해 잠식되는 것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통신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필요로 한다. 공공성 측면의 사업은 정부의 몫이며, 상업성 측면의 사업은 기업의 몫이 될 것이다. 정부가 사업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의 대북 사업 역시 단기적 수익성에 연연하면 일회성에 그치거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대북 경제 협력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업의 대북 사업은 단기적 일회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갖고 인내심 있게 추진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대북 사업은 초기부터 대규모 투자를 하기 보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선 소규모에서부터 시작하여, 경험

과 노하우, 정보와 협상력, 특히 북측과의 신뢰가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북 사업

의 성패는 상호 신뢰 구축 여부에 달려있다.

### 하드웨어 장비와 기술의 대북 반출이 허용돼야

북한의 정보통신 기기 산업에 대한 남북 IT 협력도 필요하다. 당분간 가장 유망한 협력 방식은 원부자재와 설비 제공형 임가공 사업일 것이다. 그러나 종래와 같이 단순히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발상은 이제 버릴 때가 되었다. 남한의 부족한 인적 자원을 북한에서 아웃소싱한다는 발상도 배제되어야 한다.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은 무엇보다 기술 교류 협력이어야 하며, 지금은 기술 집약적 산업에서 남북 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한 때이다. 남북 경제 협력은 생산 요소의 상호 보완성뿐만 아니라, 특히 기술적 상호 보완성에 기초해야 한다. 컴퓨터 하드웨어 부문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기술 이전 없는 단순 조립이나 하청 생산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보화의 균형적 발전은 정보 기술의 상호 협력과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북한이 선호하는 협력 사업 역시 첨단 기술 이전이 가능한 분야이며,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의 대북 협력 사업은 북한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현 단계에서 남북한 정보 기술의 상호 협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역시 소프

트웨어 부문이다. 이 부문에서는 남한이 배울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만큼 이 분야에서 협력 방식은 다양하다. 소프트웨어의 남북 공동 개발도 가능하고 대북 위탁 개발도 가능하며, 디지털 콘텐츠 사업도 가능하다. 또 남한의 하드웨어 기술과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의 접목, 남한의 응용 기술·첨단 기술과 북한의 기초 과학 기술의 접목, 남한의 자본 및 마케팅 능력과 북한의 기술 접목 등도 가능하다. 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드웨어 관련 장비와 기술의 대북 반출이다. 이것은 남북 소프트웨어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이다. 북한의 컴퓨터 보급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 없이 남북 소프트웨어 협력이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의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을 대체한 바세나르협약에 의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IT 관련 장비와 기술의 대북 반출에는 현실 제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리는 '전략 물자 수출입 공고'를 통해 바세나르협약에 협조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 IT 협력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제약 요인이다. 현재 펜티엄급 이상의 PC를 포함해,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어느 경우이든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드웨어 관련 장비와 기술의 대북 반출이다. 이것은 남북 소프트웨어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이다.

있는 핵심 IT 관련 장비와 기술의 대북 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국제적 승인, 특히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결국 남북 IT 협력의 향방은 북미 관계 개선에 달려있는 셈이다.

### 남북은 21세기 정보화의 동반자

그러나 바세나르협약은 수출(반출)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각국에 위임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게다가 전략 물자 수출 통제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현실성이다. 품목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용도가 중요하다. 이중 용도 가능성 품목의 민간 용도의 중요성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략 물자 수출 통제의 기본 목적은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군사용이 아니라 민간용으로만 사용된다는 신뢰할 만한 담보가 있으면 반출은 허용되어야 한다.

물론 신뢰할 만한 담보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북한 당국이 보증하는 담보 각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용도에 대한 실제 확인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품목에 따라 투명성 확보 수준에 차이가

정보화의 기본 정신은 개방과 공유이며, 폐쇄와 배타는 더 이상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남북은 21세기 정보화의 동반자이며, 궁극적으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 선언 역시 '자주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 정보화의 균형적 발전과 남북 IT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능성에 집착하는 소극적인 자세보다 현실성에 주목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여기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북미 관계 진전 상황과 남북 관계 진전 상황, 그리고 북한의 자세 변화 등 상황 변화에 연동하여 각 품목별로 투명성 확보의 가이드 라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고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있을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유연한 자세이다. 최근 북한은 금강산 지역에 이어, 신의주에 소프트웨어 단지를 조성하고 평양시 대동강구역 탑제동 일대에 첨단전자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이들 지역을 경제 특구로 지정하여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자 한다면, 이는 고급 IT 관련 장비와 기술의 대북 반출을 용이하게 해 줄 것이다.

정보화의 기본 정신은 개방과 공유이며, 폐쇄와 배타는 더 이상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남북은 21세기 정보화의 동반자이며, 궁극적으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통일의 길이며, 이를 위해 자주적인 남북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IT 관련 장비와 기술의 대북 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우리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한 대미 협상력 제고이다. 남북 공동 선언을 실천함에 있어 대북 협상력보다 긴요한 것이 바로 대미 협상력 제고이다. 지난 7월 22일 오키나와 주요 8 개국(G8)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IT 현장' 역시 "어느 누구도 글로벌 정보 사회의 혜택(이익)에서 배제되지 말아야 한다는 포괄적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북한 역시 전지구적 정보화에서 배제되지 말아야 한다. 정보화에서 북한을 배제하는 폐쇄성은 세계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냉전의 잔재일 뿐이다. 미국 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